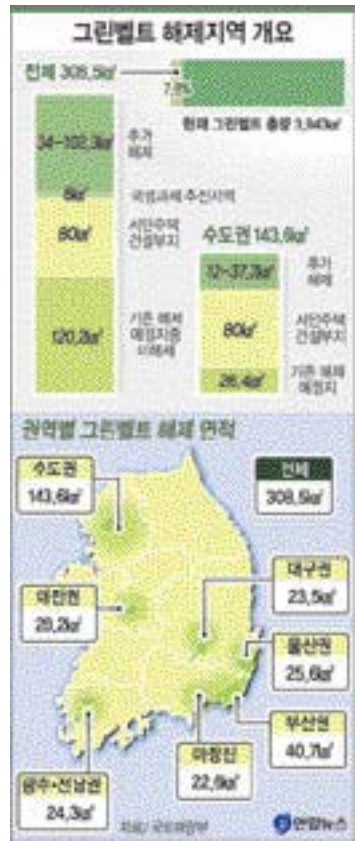


정부 2020년까지 308.5km² 규모 그린벨트 해제

보전가치 낮은 산단 인근지역 '1순위'

■ 광주·전남 어느 지역 풀릴까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 방침 발표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은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가로 몰리고 있다.

해제 가능성이 높은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은 물론 해제 가능성이 낮은 지역조차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정한 해제가능지역 기준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 ▲20만㎡이상인 지역 등 3가지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고려할 때 시·도는 그린

한다.

또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도 대부분 임야나 농경지로 도심과 거리가 멀어 개발수요가 낮은 곳여서 양 시·도는 이번 정부방침으로 폭넓은 해제로는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나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을 위주로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택지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는 곳, 택지개발 예정지역 주변, 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이 해제가능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 시도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일반적인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놓고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규제해제의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도 우려된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가 집중적으로 해제되면서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경제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평동산단, 전남 화순·나주 등 48곳 포함될 듯 환경단체 반발·난 개발·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도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린벨트는 총 525.95km로 광주는 249.25km, 전남은 276.7km이다.

광주는 광산구가 126.46km로 가장 넓고 북구 45.54km, 남구 39.34km, 동구 26.91km, 서구 11km 등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 점점지역에만 남아 있는 전남지역 그린벨트는 담양 100.5km, 장성 84.3km, 화순 41.4km, 나주 40.5km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벨트 해제지역에 광주와 전남도가 각각 정한 기준 GB조정지(장기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25.07km, 5.8km 등 총 GB조정지 면적 30.87km의 80%에 달하는 24.3km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GB 조정지는 광주 평동·하남산단 인근 지역을 포함해 광산구 두정동, 각화동 농수도매시장, 광산구 동산동 일대 등 16개 지역이다.

전남 지역 GB조정지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 4개군을 통틀어 32개소 5.8km에 달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손순기 식품관리과장이 멜라민 수거·검사 현황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핫 이슈로

멜라민 파문 속 복지부-농식품부 '주도권' 경쟁

멜라민 파문이 온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식품안전 관리를 단일 정부 기관이 맡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0일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산업 진흥은 농식품부가 더 잘할 수 있으나 식품안전 관리는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남 장태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의 생산·유통뿐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까지도 농식품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식품관리 업무를 사실상 양분해온 두 부처의 수장이 일체로 식품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원화의 주체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따라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도 당정 협의회를 열어 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 주체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다.

당정은 우선 부처간 검역 체계 일원화의 사전 작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 검사 실무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 관련 부처들의 검역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식품 안전 관리 기능은 식약청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 20여개 법률에 분산돼 안전 사각지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 되나

서울·경기 해제 지역 123km²

주거·산업·연구단지로 조성

지난달 26일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나오자 나흘 만에 수도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소관부처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월중"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할 만큼 9월말 그린벨트 해제가 10월 중 규제완화 발표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123.4km로 전체 해제면적 308.2km의 40%에 달한다.

대규모 공단 조성요구가 높은 부산과 울산 제외하면 수도권의 기존 지정면적 대비 해제비율이 8.3%로 가장 높다. 수도권에 만 공급되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80km가 모자랄 경우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수도권 해제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에는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연구단지도 들어설 수 있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만 변경하면 언제든 서울 인근 지역에 공장이 증설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중환 장관의 지난 26일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개발이의 사유화 방지를 단서로 달긴 했지만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할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층고제한과 임대주택 의무를 하향조정 같은 규제완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토 효율 이용" VS "녹색성장 배치"

정부 일방적 주도...시민단체 '철회' 요구 등 논란 불가피

정부가 308km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성역(聖域)'을 무너뜨려서라도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이후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5천397.1km(전국토의 5.4%)가 지정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이번에 해제하기로 한 308km가 풀리면 그린벨트는 3천632km만 남게 된다. 이는 애초 설정됐던 그린벨트의 67.5%이다.

정부는 총 308km의 그린벨트를 해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민주택을 건설해 수도권 주택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환경 훼손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소모적인 국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과 표고 70m이하인 지역, 20만㎡이상인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해제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방침의 확정 발표로 반발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1998년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됐을 때에는 주민대표, 환경단체 대표,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 전문가단체에도 시안을 보내 의뢰하는 등 절차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멜라민 공포...민고 먹을 게 없다

다국적기업 제품서도 검출 잇따라...소비자 불신 증폭

30일 나비스코푸드가 제조한 국내 유통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다국적기업 브랜드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자 소비자들로부터 "도대체 믿고 먹을 게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식약청의 오락가락하는 결과 발표는 검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는 미국계 식품기업 나비스코푸드 중국공장에서 생산됐다.

또 29일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FDA)이 미국계 식품기업인 크라프트

푸드 '오레오'와 마즈의 '엠&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리츠와 오레오, 엠&엠은 모두 국내에도 많은 양이 수입되는 세계적인 과자 브랜드들이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엠&엠은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엠&엠과 오레오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국내 수입품이 같은 곳에서 생산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 화순 풍류문화큰잔치

2008.10.16 (목) ~ 19 (일) 장소: 광림문화체육관광회 주차장

구분	공연시간	공연장소	공연내용
1차 공연	10월 16일 오후 7시	광림문화체육관광회 주차장	민중가요, 민중무용, 민중악기 연주
2차 공연	10월 17일 오후 7시	광림문화체육관광회 주차장	민중가요, 민중무용, 민중악기 연주
3차 공연	10월 18일 오후 7시	광림문화체육관광회 주차장	민중가요, 민중무용, 민중악기 연주
4차 공연	10월 19일 오후 7시	광림문화체육관광회 주차장	민중가요, 민중무용, 민중악기 연주